

‘새로운 경기’ 과제와 전망 - ⑤ 평화경기 구현

▶ 1면서 계속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하고, 경의·경원선 축으로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구 개발과 관련해 미군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규모와 시일이 걸리는 사업보다 한강 하구와 임진강을 활용한 생태 평화공원 조성, 방역방재 공동대응,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예술교류를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DMZ(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관광 벨트를 조성, 평화지대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DMZ의 세계평화자연유산 지정도 추진한다. 또 DMZ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완료, DMZ 내 지뢰 제거 로드맵 마련 및 DMZ 내 안전 통행 공간 확보, DMZ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말라리아·병충해 공동방역, 미세먼지 감축 등 도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협력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법제 개정과 국민 합의 필요

하지만 광역단체장은 남북경협 교류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 현

행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보면 이 당선인이 약속한 경원선 복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만 언급돼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원선보다는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단체장 권한이 아님에도 남북 해빙무드를 활용한 공약들이 제시됐다”며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는 중요한 공약일 수 있지만 남북관련 공약이 지역이 당면한 경제, 민생 등 다른 공약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공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교류사업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관련한 공약은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실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